

군사공간의 생태적 재생과 문화정치

—용산 미군기지의 경우—

홍성태

사회학자

1. 군사공간의 대량생산

흔히 20세기는 ‘과학의 세기’였다고 한다. 실로 20세기에 인류가 이룩한 과학적 성과는 눈부신 것이었다. 이에 힘입어 인류는 종래 천별로 여겨졌던 질병들을 이길 수 있게 되었고, 농산물과 공산품을 막론하고 엄청난 물질적 성장을 이루었으며, 심지어 ‘달나라’에까지 가서 그 족적을 남기게 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류는 이 놀라운 과학의 힘을 생산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할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사회를 가로로 세로로 복잡하게 가르고 있는 구조적 불평등은 이 놀라운 과학의 힘을 유례없이 파괴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현대과학이 이룩한 거대 생산력은 곧 거대 살상력이기도 했다(김진균·홍성태, 1996: 1장, 11장).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준다.

더욱이 1945년 이후조차도 결코 ‘전후’는 아니었다(Toffler, 1994: 28). 미·소 냉전은 사실상 또 다른 세계대전이었고,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을 비롯해서 수많은 국지전들이 끊임없이 전개되었던 것이 바로 ‘전후’였기

때문이다. 냉전은 끝났으나 이런 상황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 요컨대 탈냉전은 아직 탈군사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군사적 대립과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이정록·김송미·이상석, 1997).

‘전쟁의 세기’로서 20세기는 참혹하기 이를 데 없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불구가 되었으며, 수많은 재화들이 엄청난 살상행위를 위해 소모되었으며, 그리고 자연생태계 자체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SIPRI, 1976; WCED, 1987: 356-367). 평화시라고 해도 대규모 상비군을 보유하는 것과 막대한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군수산업을 유지하는 것이 20세기 국가의 생존조건이 되었다. 이렇게 대규모 군대와 군수물자를 항상적으로 보유하는 것 외에 ‘군사공간’이 대량생산되었다는 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변화이다.

‘군사공간’은 군사적인 목적으로 점유되고 이용되는 공간이다. 그것은 땅뿐만 아니라 물과 하늘도 포함한다. 그리고 이미 오래 전부터 하늘은 지구 대기권 밖의 우주까지도 포함하고 있다(홍용식, 1991).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용도로 보자면, 그것은 크게 전쟁터·훈련장·부대·각종 시설 등으로 나뉜다. 전쟁터는 살상행위가 직접적으로 벌어지는 공간인만큼 군사공간의 파괴성을 가장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보다 덜하기는 하지만 훈련장도 군사공간의 파괴성이 잘 드러나는 공간이다. 예컨대 미 국방부도 ‘폭격연습에 사용된 토지는 인간이 사용할 수 없는 지역으로 영구적으로 폐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¹⁾(Renner, 1991: 233). 부대와 각종 시설이 들어선 공간은 겉보기에는 전쟁터나 훈련장만큼 파괴적이지 않다. 그러나 이 공간도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유발하거나

1) 화성군 매향리의 미공군사격장과 태백산의 전술공격훈련장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미군은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빌미로 이에 대한 어떠한 합리적인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미군의 자국 내 활동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해외 군사기지들은 국가환경정책법의 적용을 면제’받고 있다(Renner, 1991: 246). 이 점에서 해외의 미군 기지들은 명백한 ‘불의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공간의 합리적 이용을 저해하는 식으로 파괴적 결과를 낳고 있다.

이처럼 ‘군사공간’은 본질적으로 파괴적인 공간이다. 그것은 자연과 인간과 사회를 파괴하거나 파괴하기 위한 공간이다. 20세기를 ‘전쟁의 세기’라고 했을 때, 그 주요한 특징으로 경제의 군사화와 사회의 군사화에 ‘공간의 군사화’를 덧붙여야 한다. ‘군사공간의 대량생산’은 그 명백한 증거이다. 이제 이러한 상황에 중지부를 찍어야 한다. ‘군사공간의 생태적 재생’은 이를 위한 하나의, 그러나 절대적으로 유한한 공간을 정의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서 중요하다.

2. 역설의 공간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간의 군사화’의 경우에도 미군의 영향력은 압도적이다. 미군은 자국 내에 대단히 많은 ‘군사공간’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²⁾ 전세계 88개국에서 수많은 ‘군사공간’을 확보하고 운용하고 있다. 미국의 주요한 군사적 동맹국들 중의 하나인 한국에서 미군은 1999년 9월 현재 7,400만 평을 넘는 땅에 93개의 기지를 운영하고 있다.³⁾ 모든 기지마다 오래 전부터 많은 문제들을 낳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용산 미군기지의 의미는 각별한 점이 있다. 물론 파괴성의 정도로 보자면, 매항리나 태백산의 경우가 훨씬 더 심각할 것이다. 그러나 용산 미군기지는 한국의 수도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는 대규모 외국군 기지로서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세계적인’ 사례에 속한다.

2) 미국 내 미군 기지의 생태적 파괴상에 대해서는 Renner(1991), Shulman (1992), 김진균·홍성태(1996: 6장)을 참조.

3) 1997년의 국방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공여지는 총 8,025만 평이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자산가치는 12조 6,300억 원에 달했다. 그 규모는 여의도 광장의 600배, 인천시의 약 1.5배에 이를 정도로 엄청나다. 이러한 공여지를 미군은 모두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엮음, 1999: 158, 165).

1) 용산 주둔지

미군은 용산 미군기지를 ‘용산 주둔지(Garrison)’라고 부른다. 이 방대한 규모의 주둔지는 메인 포스트(Main Post), 사우스 포스트(South Post), 캠프 코이너(Camp Coiner), 캠프 킴(Camp Kim) 등 네 부분으로 크게 나뉜다(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1999: 174-175).

메인 포스트에는 한미연합사령부를 비롯해서 주요 사령부가 위치해 있다. 한미연합사령부 건물은 1978년에 한미연합사가 창설되면서 건축되어 현재는 유엔사령부와 함께 쓰고 있다. 한미연합사령부 지하에는 극비 지휘소인 ‘서울’이 있다. 한미연합사령부 건물의 맞은편에는 주한미군 및 미 8군 사령부가 사용하는 오래된 2층 건물이 있다.

사우스 포스트는 메인 포스트의 맞은편에 한국 국방부를 감싸는 형태로 위치해 있다. 이곳에는 주택, 병원, 클럽, 스포츠센터 등 미군 장병들을 위한 각종 오락 및 편의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 아동센터, 초등학교, 대학교 등의 교육시설, 파파이스, 버거킹, 베스킨라빈스 등의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용산 미군기지 주변에도 여러 가지 시설들이 위치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시에 한미연합사가 옮겨갈 지하기지인 탱고(TANGO)이다. 이 기지는 전시에 한미연합사령관을 비롯한 한미 양국군 지휘관들이 첩보위성 및 정찰기, 오산기지 및 미 본토로부터 각종 정보를 신속하게 받아 한미 양국군을 지휘통제하는 두뇌에 해당된다. 미국의 최첨단 지휘·통제·통신·정보(C³I)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핵공격을 받아도 견딜 수 있는 화강암 속에 자리잡고 있다. 또한 이 기지는 화학 및 생물학 무기에도 대응할 수 있다. 한미 양국군 지휘관들은 평상시와 전쟁발발 직전에는 ‘서울’에서 지휘를 하다가 전쟁이 본격화되면 ‘탱고’로 옮겨가도록 되어 있다.

‘용산 주둔지’의 규모는 105만 평에 이른다.⁴⁾ 이 정도면 얼마나 큰 땅일까? ‘남산공원의 1.2배, 서울대공원의 3배, 어린이공원의 6배, 서울의

고궁을 다 합친 것이나 여의도보다 더 넓고, 샌프란시스코의 골든 게이트 공원보다 조금 작지만, 뉴욕의 센트럴 파크에 버금가고, 영국의 하이드 파크의 2.4배¹⁾나 되는 크기다(강홍빈, 1997). 한강로에서 보자면, ‘용산 주둔지’는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에서 ‘삼각지역’을 지나 ‘신용산역’까지 이른다. 다시 국철 구간으로 보자면, ‘이촌역’에서 ‘서빙고역’까지 이른다. 이 방대한 공간에 미군은 군사시설, 행정시설, 상업시설, 민간업무시설, 문화시설, 종교시설, 스포츠시설, 교통관련시설, 숙박시설, 언론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주거시설 등의 다양한 시설들을 갖추어 놓았다(정기용, 2000: 15-18). 사람들이 이곳을 ‘용산합중국’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단지 이곳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곳이어서가 아니라, 도로와 철도 등의 하부시설을 비롯해 이처럼 다양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2) 불의의 공간

우리가 ‘용산 주둔지’를 문제로 삼는 이유는 단순히 그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이 아니다. 물론 수도 한복판에 외국군의 거대한 ‘주둔지’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주한미군이 이 땅에서 주둔하고 있는 불의한 방식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우리가 필요해서 그들을 불러들였다는 역사적 사실과 그들이 동북아에서

4) 그 면적에 대해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1999: 174)는 96만 평으로, 심지어 2000년 6월 8일치 《주간조선》의 관련 기사(유용원, 2000)는 78만 평으로 밝히고 있다. 전자는 남영동의 철로가에 있는 USO 부지 등을 제외한 것으로 보여 이해가 되지만, 후자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턱없이 적은 수치가 나온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한편 조명래(1996: 3)는 그 면적이 105만 평으로 용산구 전체 면적의 15.9%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1900년대에 일본이 강탈해서 처음으로 기지를 조성한 면적이 115만 평이었고, 미군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이 땅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그리고 지금까지 미군이 돌려준 땅은 골프장 부지 9만 평에 불과하다. 여기에 미군의 주둔 이후 도로로 편입된 땅을 제외하면, 대체로 105만 평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체 면적에 대해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 것 자체가 이 땅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차지하는 전략적 가치를 무조건 부정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불의한 주둔 방식을 묵과하는 것도 분명히 옳지 않은 일이다. 요컨대 주한미군 자체가 불의한 존재는 아닐지라도, 그들이 주둔하고 있는 방식은 불의하기 짝이 없다. 이 점에서 전국의 모든 미군기지는 ‘군사공간’일 뿐만 아니라 ‘불의의 공간’이기도 하다. 그리고 용산 미군기지는 수도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불의의 공간’으로서 전국의 미군기지를 대표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첫단추부터 잘못 끼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한국전쟁이라는 화급한 상황에서 작전지휘권을 미군에게 넘겨 버린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 잘못은 1954년에 발효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이에 근거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⁵⁾으로 확대된다. 주한미군은 불행을 불의로 바꾸어 버린 이 ‘조약’과 ‘협정’에 의거하여 주둔하고 있다. ‘조약’ 제4조는 ‘상호적 합의에 의해 미합중국의 육군과 해군, 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규정했으며, 다시 제6조에는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뒤 1년 뒤에 본 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협정’은 ‘미-일 협정’이나 ‘미-필리핀 협정’과 달리 미군기지 시설과 구역의 공여대상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형식도 기한을 정한 임대형식이 아니라 무기한 무상공여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양국이 주권국간의 호혜평등한 관계를 이루려면 ‘협정’뿐만 아니라 ‘조약’ 자체를 재검토해야 마땅하다(이장희, 1999; 황상철, 2000).

그러나 ‘조약’은 물론이거니와 ‘협정’의 개정도 아직까지는 요원한 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대표적인 ‘불의의 공간’으로서 ‘용산 주둔지’의

5)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다. 외교통상부 공식명칭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며, 일반적으로는 ‘한미행정협정’이라고 부른다. ‘행정협정’이란 명칭은 사실 부적절한 것이다(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1999: 27).

문제점만 더욱 도드라지고 있다. 특히 지난 봄에 전개된 용산구청과 미8군의 싸움은 그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낸 중요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⁶⁾ 이 싸움의 현안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용산 주둔지’에 국내 건축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따르면 미군은 국내 건축법을 따라야 하는데, 미군은 이것을 무시한 채 ‘용산 주둔지’ 내에 호텔을 새로 짓고 있다. 둘째, 주한미군 소속차량의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징수 문제이다. 용산구 교통지도과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주한미군 소속차량에 부과한 과태료는 3억8,588만 원에 이르지만 징수액은 1,558만 원으로 납부율은 4%에 불과하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이와 관련된 조항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를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본국으로 돌아갈 때 주·정차위반 딱지를 ‘한국방문 기념품’으로 갖고 가는 미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셋째, 관내 이태원에 있는 아리랑택시의 차고지 반환 문제이다. 용산구에 따르면 미군은 군사용으로 제공받은 이 땅을 국내 한 택시회사에 대여해 ‘부당 수입’을 올리고 있다. 용산구는 이 땅을 반환받아 이곳을 관광특구로 개발하려고 하지만, 미군측은 부당한 요구조건을 제시하며 사실상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조성식, 2000).

3) 역설의 공간

‘용산 주둔지’는 ‘망각의 공간’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스스로 잊어버린 공간이 아니라, 잊어버리도록 강요당한 공간이다.⁷⁾ 이 땅의 다른 미군

6) 이 싸움에는 젊은 민선 구청장인 성장현 씨의 개인적 노력이 큰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그가 중도에 구청장직을 내놓게 되면서 이 싸움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흐지부지되어 버리고 마는 듯하다. 그러나 이 싸움을 계기로 미군기지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국자치단체협의회가 결성된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하겠다.

7) 2000년 10월 19일 건국대 새천년관에서 열린 ASEM 2000 한국민간단체 포럼 문화분과 워크숍에서 한 토론자는 ‘용산 주둔지’를 ‘존재하지 않는

기지들과 마찬가지로 ‘용산 주둔지’는 전쟁이라는 화급한 상황을 배경으로 미군에게 우리가 내준 땅이다. 비록 강제로 빼앗긴 것은 아닐지라도 잃어버린 땅이라는 것은 틀림없다. 그리고 ‘조약’과 ‘협정’이 존속되는 한, 우리가 이 땅을 되찾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차라리 잊고 사는 편이 나은 땅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용산 주둔지’를 ‘망각의 공간’으로 내버려 둘 수 없다. 미군은 우리에게 이 땅을 ‘망각의 공간’으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지만, ‘불의의 공간’으로서 ‘용산 주둔지’는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김용한, 1996). 이 땅을 ‘망각의 공간’으로 내버려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불의’를 참고 살아간다는 것을 뜻한다. 복단이 뚝 잘려나간 동작대교나 신용산으로 휘어들어 동작대교를 건너는 지하철 4호선이 그 좋은 예이다. 이러한 불의는 지난 2월에 발생하고 7월에야 그 전모가 밝혀진 포름알데히드 불법방류 사건⁸⁾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이제 이러한 불의는 종식되어야 마땅하다.

현재의 ‘조약’과 ‘협정’이 유지되는 한, 이 땅의 모든 미군기지들은 ‘불의의 공간’이며 ‘망각의 공간’이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기지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영원한 ‘죽음의 공간’이 되겠지만, 어떤 것들은 재생의 가능성을 안고 있기도 하다는 사실이다. 도시에 자리잡고 있는 기지들은 대체로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매향리의 미공군사격장⁹⁾은 아

장소, 그러나 우리의 몸과 의식을 식민화하는 장소’로 규정했다(건국대 건축전문대학원 이상현 교수). 망각을 강요당하여 결국 망각하기에 이르른 것이야말로 ‘식민화’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에서 ‘용산 주둔지’를 되찾는 것은 이러한 ‘식민화의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8) 필자는 이것을 ‘페트로스키 카테일 사건’이라고 부른다. 여기에는 이 수치스러운 사건에 대한 미8군 사령관인 페트로스키 장군의 책임을 묻는다는 뜻이 담겨 있다. 그 주둔방식과 행태가 불의한 것인 한, 한국에서 미군은 대단히 수치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한미군은 잘 알 필요가 있다.
- 9) 이에 대해 매향리의 주민들은 세계 최대의 군수업체인 미국의 ‘록히드-마틴’사의 신무기 실험장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마도 영원히 복구될 수 없는 ‘죽음의 공간’으로 남겠지만,¹⁰⁾ 전국의 도시들에 굳게 자리잡고 있는 기지들은 지난 수십 년간의 ‘난개발’로 엉망이 되어버린 도시구조를 되살리는 ‘재생의 공간’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재생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의 미군기지들은 ‘역설의 공간’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용산 주둔지’가 차지하는 의의는 대단히 크다. 이곳을 ‘재생의 공간’으로 바꾸는 것은 전국의 미군기지들, 특히 도시의 미군기지들을 ‘공간정의’의 견지에서 활용하는 모범적 사례가 될 것이다. 잘 알다시피 서울의 산들을 빼고 ‘용산 주둔지’는 서울에서 녹음이 가장 우거진 곳이다. 무려 105만 평에 이르는 이 땅에는 비록 많은 시설들이 들어서 있기는 하지만, 이 모든 시설은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큰 나무들과 풀밭 사이에 자리잡고 있다. 용산 미군기지는 그 자체가 거대한 사막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의 오아시스이다.

30년간의 ‘개발독재’를 거치면서 서울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난개발’의 도시가 되었다. 그것은 세 가지 면에서 검토될 수 있다. 첫째, 그때그때의 경제적 및 정치적 필요에 따라 서울은 그 외연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갔다. 애써서 계획을 세웠다고 해도 그 계획은 쉽게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 둘째, 마찬가지로 그때그때의 경제적 및 정치적 필요에 따라 서울은 그 내부를 멋대로 바꾸어왔다. 정도 600년의 역사는 몇 가지 유적을 통해 흔적으로만 남아 있을 뿐이다. 셋째, 이런 ‘난개발’의 과정에서 일관되게 추진된 것은 생태적 파괴이다. 하천은 오염되고 복개되고, 녹지는 건물과 도로로 사라져 버렸다. 서울의 상공에는 늘 시커먼 스모그가 떠 있고, 서울의 거리에는 늘 쓰레기가 나뒹군다.

30년간의 ‘개발독재’는 사실상 ‘파괴독재’였다(홍성태, 2000). 역사와 문화와 자연이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모두 파괴되었다. 이런 파괴를 통해 서울은 그 자체가 거대한 사막이 되어 버렸다. 자연의 사막은 황량해 보

10) 현재 매향리의 미공군사격장은 주변지역까지도 ‘죽음의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 미공군사격장이 철수된다면, 그 땅은 ‘죽음의 공간’으로 남겠지만, 주변지역은 다시 ‘삶의 공간’으로 변할 것이다.

이나, 생태적으로 풍요로운 지역이다. 그러나 역사와 문화와 자연이 모두 파괴되어 버린 인공의 사막은 황황찬란해 보이지만, 시멘트와 자동차와 쓰레기로 뒤덮인 생태적 불모지이다. 서울은 이런 인공의 사막이다. 그러므로 푸르른 녹음을 사랑하는 ‘용산 주둔지’는 이런 서울의 오아시스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남산에 올라 이 땅을 내려다보노라면, 그 녹음에 자못 감동을 느끼게 될 정도이다. 불의와 망각의 대가로 이런 녹음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역설적이다.

3. 생태적 재생의 문화정치

‘군사공간의 생태적 재생’이란 오염되고 파괴된 군사공간을 단순히 생태적으로 복원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생태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있도록 군사공간을 생태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필리핀의 수빅만에 있던 미 해군 클라크기지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군사공간은, 특히 미군의 해외기지는 생태적으로 극심한 오염과 파괴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¹¹⁾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복원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이런 공간은 말 그대로 거의 영구적으로 ‘죽음의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게 시간과 돈을 들여 복원에 성공한다고 해도, 무분별한 개발은 그 공간을 다시금 ‘죽음의 공간’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 것이다. 제도적 접근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문화적 접근이 중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문화생태공간을 목표로 삼는 문화생태정치로 추구될 수 있다.

11) 이에 대해서는 《한겨레신문》의 기획물인 ‘주한미군을 다시 본다’의 2, 3, 4, 5회 기사를 참조. 각각 오키나와(8월 7일치), 비에케스(푸에르토리코, 8월 21일치), 만하임(8월 28일치), 수빅만(9월 4일치)을 다루고 있는 이 기사들은 해외주둔 미군기지들의 파괴적 실태를 잘 보여준다.

1) 두 가지 원칙

‘용산 주둔지’가 ‘불의의 공간’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하다. 이제는 서울의 한복판이 되어 버린 드넓은 땅에 외국군 대부대가 주둔하고 있다는 것조차 비상식적인 일이거니와, 더욱이 그런 주둔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불평등한 ‘조약’과 ‘협정’에 의거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10년 전에 미군이 ‘용산 주둔지’의 이전에 대해서 동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¹²⁾ 그러나 그 뒤의 경과를 보면 당시 미군의 동의는 정치적 상황에 따른 ‘거짓’이었을지도 모른다. 예컨대 미군은 1991년에 이전비용 예상액으로 17억 달러를 제시했으나, 1992년에는 무려 95억 달러로 제시하여 협상을 사실상 거부했다(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엮음, 1999: 273).

이밖에도 미군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조건들을 제시했으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반환이 아니라 ‘이전’을 주장했다는 데에 있다. 정부는 평택의 기존 미군기지로 옮기기로 하고 이전을 추진했으나, 이에 맞서 평택 주민들은 대대적인 이전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기존의 미군기지만 해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낳고 있는 판에 새롭게 거대 기지가 이전해온다는 데 대해 반대하지 않을 사람들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므로 ‘용산 주둔지’의 이전은 그 생태적 재생의 출발점이 될 수 없다. 그 출발점은 분명히 ‘반환’이 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어려운 점은 ‘용산 주둔지’에 주한미군의 사령부가 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이 완전히 철수하지 않는 한, 사령부는 어디론가 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사령부를 옮기

12) 이와 관련된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당시 미 국무장관이었던 조지 슐츠가 성남에서 헬기를 타고 ‘용산 주둔지’로 오게 되었다. 부근 상공에 이르러 그는 저 아래에 건물들 사이로 펼쳐진 드넓은 녹지를 보게 되었다. 그때 그는 수행원에게 ‘저기가 거기냐’고 물었다고 한다. 수행원이 그렇다고 하자 그는 ‘그렇다면 이걸 돌려주는 것이 옳겠다’고 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한미간에 협상이 급진전되어 1996년 말까지 돌려주기로 되었다는 것이다.

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주둔방식 자체를 재조정해야만 한다.¹³⁾ 이 좁은 나라에서 ‘용산합중국’과 같은 형태의 주둔은 아무래도 불의한 것이 아닐 수 없다. 기존의 기지를 확장하여 사령부를 이전하는 방식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전체 미군기지를 명확한 임대계약에 의거하여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미군기지로 인한 각종 피해에 대해 미군은 엄정히 보상하도록 해야 한다.¹⁴⁾

반환이 ‘용산 주둔지’의 생태적 재생의 출발점이라는 점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도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반환 이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역설의 공간’으로서 ‘용산 주둔지’의 생태적 가치이다. ‘용산 주둔지’는 북한산에서 남산을 지나 한강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에 자리잡고 있다. 이 녹지축을 관악산으로 연결할 때, 그것은 전체 서울의 남북 녹지생태축을 연결하는 중심부가 된다. 이 땅을 가장 정의롭게 사용하는 길은 그 생태적 가치를 최대한 살리는 것이다. 그 까닭은 이것이 서울의 도심부를 생태적으로 되살리는 유력한 길이며, 따라서 전체 시민의 ‘삶의 질’을 생태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개발의 유혹과 압력을 물리치고 ‘용산 주둔지’의 생태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활용의 대원칙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당연한 원칙을 지키고 실현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미 이에 대한 두 가지 큰 개발의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 첫째, 이 땅의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경제적 개발의 위협’이다. 특히 두드러지는 것은 아파트 건설이다. ‘남산 제모습

13) 현재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주한미군과 관련된 논의는 크게 당장철수론, 현상유지론, 재조정론의 세 갈래로 나누어볼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여러 가지 변화를 고려할 때, 이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논의는 ‘재조정론’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정치군사적인 사항들 외에 사회, 문화, 경제, 생태 등의 사항들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14) 이런 점에서 ‘조약’과 ‘협정’의 전면적인 개정은 제도적인 차원에서 ‘용산 주둔지’의 반환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된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발표된 가장 집중적인 연구로는 이장희 외(2000)을 참조.

찾기 사업'이 한창일 때, '남산턱 포사격장이던 군인 아파트 부지에 주택 조합이 고층 아파트를 짓겠다'고 나서기도 했다(강홍빈, 1997). 둘째, 역시 이 땅의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정치적 개발의 위협'이다. 그 좋은 예로는 전쟁기념관과 국립중앙박물관을 들 수 있다. '일국의 얼굴이라 할 국립박물관이 지하철과도 잘 닿지 않고, 도시에서 잘 보이지도 않는 용산 한구석에, 그것도 습기찬 땅'에 들어서고, '독립기념관의 넓은 계곡에는 불거리를 넣지 못해 야단인데 전쟁기념관이 꼭 이 자리를 차지해야' 하는 이유는 어떤 것일까?(강홍빈, 1997)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이유로 저 '파괴독재'의 시대에 살아남은 서울의 양지를 다시금 개발로 파괴해 버려서는 안될 것이다. 오히려 '용산 주둔지'는 난개발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시민의 생태공간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2) 문화생태공간

1988년에 이전협상이 시작되면서 서울시는 '용산 주둔지'를 '민족공원'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은 '용산 주둔지'를 '뉴욕의 센트럴 파크와 맞먹는 세계 수준의 공원을 만들자'는 것(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1999: 272)으로서 다른 경제적 및 정치적 목적의 개발에 비해 월등히 진보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7개의 소주제 공원으로 꾸미는 식의 발상은 '생태적 재생'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역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비해 '용산 주둔지'를 '고리삼아 한강과 남산을 잇고, 나아가 관악산과 북악을 공원축으로 연결한다는 꿈'(강홍빈, 1997)은 훨씬 주목할 만하다. 이 구상의 요체는 '용산 주둔지'를 이용하여 서울의 남북 녹지생태축의 재생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이 구상은 생태적 재생의 원칙에 가장 충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00년 4월에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문화연대)는 사실상 이와 동일한, 그러나 좀더 구체적으로 발전시킨 구상을 제시했다. 그리고 2000년

10월 현재 ‘문화연대’는 ‘문화생태공간’¹⁵⁾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개념은 우선 종래의 ‘공원’ 개념에서 벗어날 것을 요청한다. 공원이 품고 있는 인위적이고 제도적인 함의는 생태적 재생의 원칙과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요컨대 공원이 인위적인 것으로 채우는 것이라면, 공간은 인위적인 것을 비우는 것을 함축한다. ‘인위적인 것을 비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연을 살리는 것이며, 따라서 생태적 재생의 원칙과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생태공간 구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론들이 제기될 수 있다. 우선 ‘용산 주둔지’의 반환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반환뿐만 아니라 이전도 거부하고 오직 ‘현상유지’가 최상책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 당사자임에 틀림없는 미군이 아직까지는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⁶⁾ 미군으로서는 ‘용산 주둔지’의 반환이 전체 주한미군 기지들의 반환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15) 물론 ‘문화연대’가 처음부터 이 개념을 제시했던 것은 아니다. 처음에 ‘문화연대’는 ‘시민생태공원’이라는 개념을 제시했고, 얼마 뒤에는 다시 ‘문화생태공원’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그리고 아셈 민간포럼에 참여하기 위한 회의를 하는 도중에 비로소 ‘문화생태공간’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졌다.

16) 이런 입장을 전제로 지역사회와 미군의 관계를 조절하려는 모임들이 열리고 있다. 예컨대 용산구와 관내 미군부대는 매분기에 한 차례, 1년에 네 차례 정도 ‘한미친선협의회’라는 모임을 갖는다. 용산구청장은 이 협의회의 한국측 위원장이다. 위원은 모두 14명으로 경찰서장, 소방서장, 세무서장 등 지역 기관장들이 주요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 밖에 의사협회장, 여성계 대표, 용산구 행정관리국장 등이 참석한다. 미군측의 위원장은 34지원단장인 용산부대장이며, 그 밖에 8군 공병대장, 8군 병원장, 헌병대장 등 11명이 참석한다. 성장현 전 용산구청장은 이 모임 덕분에 미군의 호텔 증축 사실을 알게 되었다(조성식, 2000). 성장현 전 용산구청장처럼 이런 모임을 미군의 불법사실을 확인하는 계기로 활용한 경우도 있지만, 이런 모임을 지자체와 미군의 유착을 위한 계기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최근에 파주에서는 이런 모임이 술파티를 벌이며 우의를 다지는 자리로 이용되었다. 미군 부대에서 유출된 폐유가 주민의 식수원을 오염시키는 사건이 발생하여 지역주민들이 미군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을 때 벌어진 일이었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한미군 기지들이 거대한 ‘경제적 수익시설’이기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러한 입장을 고수하려고 할 것이다.¹⁷⁾

이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태도는, ‘용산 주둔지’ 내의 불법건축¹⁸⁾을 둘러싼 용산구와 미8군의 싸움에서 드러났듯이, 여러 면에서 문제가 많다. 특히 주무부서인 외교통상부의 태도는 명백히 미군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주무부서인 국방부는 이 싸움에서 용산구청을 지지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군사적 동맹관계 때문에 그런 입장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 서울시는 용산구청의 입장을 명시적으로 지지했지만, 반환이 아니라 이전을 전제로 ‘용산 주둔지’의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반환의 원칙이 정부의 정책으로까지 실현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과제라는 것을 여기서 잘 알 수 있다.

‘용산 주둔지’를 둘러싼 시민단체들 사이의 논란은 반환이 아니라 활용에 관한 것으로 넘어간다. 그 요점은 105만 평이나 되는 드넓은 땅을 전부 문화생태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실현될 수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이 반론에 대해 적절한 답변을 제시하기란 사실 대단히 어렵다. 서울의 한복판에서 105만 평이나 되는 드넓은 공공 용지를 다시 찾아낼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이 땅의 생태적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땅이 각종 건물들로 뒤덮인다면, 북한산에서 남산을 거쳐 한강으로 이어지는 생태축을 회복하여, 서

17) 1995년 3월 17일에 미8군 관계자들이 밝힌 것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1994년에 기지 내에 설치한 클럽, 양식당, 슬롯머신 6천여 대, 7개 골프장 등의 위락시설들을 이용하여 무려 2,9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 이용객 중 한국인의 비율은 놀랍게도 80% 정도를 차지한다. 또한 미군, 미군속, 그들의 부인들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영어교습도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 그 수입이 대단히 좋기 때문에 한국 연장근무를 신청하는 미군들도 많다고 한다(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1999: 123-128).

18) 이 건물은 객실이 90개가 넘는 호텔이다. 미군은 이것을 지어서 ‘영리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나 ‘용산 주둔지’는 군사적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다. 사실 미 대사관이 ‘용산 주둔지’ 내에서 8만 평의 땅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불법이다. 이런 마당에 미군은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르려는 것이다. ‘용산 주둔지’는 거대한 ‘불법의 공간’이다.

울의 생태적 재생을 도모할 기회는 완전히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론이 제시하는 대안은 ‘용산 주둔지’ 105만 평을 몇 개의 블록으로 나누어 접근하자는 것이다. 예컨대 ‘용산 주둔지’를 동서축과 남북축으로 나누어 보자. 전자는 삼각지에서 반포로 연결되는 도로를 중심으로 크게 두 개의 블록으로 나누는 것이다. 후자는 현재 건설중인 국립중앙박물관을 기점으로 갈월동 쪽으로 쪽 선을 그어보는 것이다. 이렇게 나누어 보면 결국 네 개의 블록이 생긴다. 반포대교를 중심으로 시계방향 순으로 가, 나, 다, 라 블록으로 부르도록 하자. 이렇게 하면 삼각지 부근은 나와 다에 해당되는데, 국방부와 전쟁기념관이 들어서 있는 이 지역에 복지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다. 용산가족공원과 국립중앙박물관이 자리잡고 있는 지역은 가에 해당되는데, 남산에 인접한 라와 함께 이 지역을 문화생태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한다.

이러한 블록화 접근법은 상당히 현실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주의는 흔히 현실추수주의로 귀결되곤 한다. 이렇게 되어서는 결국 문화생태공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포기될 가능성도 크다. 더욱이 용산구 장기발전계획에 따르면 용산구는 장차 한강로 지역을 국제적 업무중심지역으로 개발하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반포로와 한강로를 더욱 원활하게 묶을 필요성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 반포로 쪽의 생태공간은 쾌적한 고층아파트단지로 개발되어 버릴 것이다. 한강을 막고 들어선 이촌동과 원효동의 고층아파트단지들이 블록화 접근법에 따른 ‘용산 주둔지’의 미래가 될 것이다.¹⁹⁾

3) 문화생태정치

문화생태공간 구상의 물리적인 목표는 ‘용산 주둔지’ 105만 평 전체를

19) 다른 예로는 신대방동에 있던 ‘공군본부’가 ‘보라매공원’으로 바뀌고, 다시 초고층 아파트단지로 크게 훼손된 것을 들 수 있다. 이렇게 변하기까지 채 10년도 걸리지 않았다.

‘자연 숲’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서울의 생태적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종을 선정하고 식목해야 한다.²⁰⁾ 이러한 식목사업은 물론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적어도 50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전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이 사업의 의의는 단지 ‘자연 숲’을 만든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지평을 멀리 후손에게까지 확장할 것을 요구한다. 여기서 잘 알 수 있듯이, 문화생태공간 구상은 공간을 바꾸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시간을 바꾸는 것이기도 하다. 문화생태공간 구상이 추구하는 ‘자연 숲’은 ‘자연 공간’일 뿐만 아니라 ‘느린 공간’이다. 그것은 갈수록 ‘시간기근’과 ‘속도경쟁’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에게 귀중한 휴식처가 되고, 나아가 이러한 현대적 삶의 비인간적 면모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다.²¹⁾

문화생태공간 구상이 시공간의 변화를 도모하는 기획인 만큼 당연하게도 그것은 그 자체로 침예한 정치적 사안이 된다. 이에 대해 ‘생태적 재생을 위한 문화정치’로서 문화생태정치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시공간관의 변화를 핵심적인 과제로 추구하는 이 새로운 문화정치의 출발점은 문화와 생태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지배적인 문화 속에서 문화와 생태는 흔히 대립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실

20) 이와 관련하여 한 전문가는 이 공간의 정치적 상징성을 고려하여 한국의 고유 수종으로 식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ASEM 2000 한국민간단체포럼 문화분과 워크숍’에서 조명래 단국대 지역개발학과 교수). 이 제안은 700년 전부터 외국군의 주둔지로 이용되어온 이 땅의 역사를 바꾸기 위한 것으로서 중요하다.

21) ‘파괴독재’ 시대에 자행된 난개발은 한 자리에서 음식을 다 먹고 옆자리로 옮기는, 그런 식으로 모든 음식을 삼시간에 다 먹어치우는 ‘미치광이티 파티’(Wiener, 1954: 57)와 같은 것이었다. 문화생태공간은 이런 방식의 개발을 저지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후손의 권리를 강조하는 ‘지속가능한 개발’(WCED, 1987)에 다시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보화에 따른 ‘가속화 경향의 강화’에 맞서서 ‘지금’이라는 시간을 적어도 1만 년의 관점에서 보자는 ‘롱나우(Long-Now)’운동(Brand, 1999)도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

제로 대립하는 것은 문화와 생태가 아니라 개발주의적 문화관과 생태주의적 문화관이다. 전자가 전통적인 문화관이라면, 후자는 생태위기 시대의 새로운 문화관이다. 문화와 생태를 대립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문화를 반생태적이거나 비생태적인 것으로 여기는 개발주의 문화관이야말로 잘못된 것이다.

‘용산 주둔지’의 생태적 재생과 관련해서 문화생태정치는 두 가지 과제를 추구하게 된다. 첫째, 이왕에 들어서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용산 주둔지’의 생태적 재생을 꾀해야 한다. 이것은 국립중앙박물관도 생태적 재생의 원칙에 충실하게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요컨대 국립중앙박물관이 생태적 공간 속의 ‘인공 섬’으로 되지 않도록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생태적 가치 자체를 우리 시대가 요청하는 긴박한 문화적 과제로 제시해야 한다. 이것은 ‘파괴독재’의 시대를 지나며 습속화된 태도, 즉 자연을 단순히 개발의 대상으로 여기는 태도 자체를 반성하고 고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문화생태’는 새로운 시대적 가치로서 ‘생태문화(eco-culture)’를 함축하게 된다.

생태와 문화의 통합적 이해가 문화생태정치의 출발점이라면, 그 구체적인 전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주체가 명확하게 서야 한다. 이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은 시민이 제안하고 참여하고 주도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요컨대 ‘용산 주둔지’의 생태적 재생은, 700년 전의 몽고 점령시대 때부터 지속되어온 군사적 강점의 역사를 끝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이용과정에서 줄곧 배제되어온 시민을 주체로 세우는 것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 ‘용산 주둔지’의 생태적 재생은 근대적 시민주권의 확립이라는 견지에서 식민과 독재로 점철된 이 사회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시민의 힘이 실제로 관철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그것을 응집시킬 수 있는 조직이 불가결하다. 목표의 복잡성과 장기성을 고려했을 때, 이 조직은 특히 국내외의 사회운동단체들과 연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야 할 것이다. 부문별로 보자면, 특히 평화운동 및 환경운동과 연대하는데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미국 정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국 내의 여론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 미국의 평화운동 및 환경운동 단체들과 연대하는 것은 이 조직의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용산 주둔지’의 생태적 재생은 정치군사적 사안이기애 앞서서 일상의 삶과 떼어 수 없이 깊게 연관된 시간의 변화를 요청하는 사안이라는 점이다. 이 사실 자체를 정치화하고 널리 확산시키는 데 문화생태정치의 궁극적인 성패가 달려 있다.

4. 맺음말

‘용산 주둔지’가 ‘불의의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오래 전부터 이 땅의 변화를 꿈꾸어 왔다. 그 꿈은 정부종합청사를 옮기거나, 서울시청을 옮기거나, 아파트를 짓거나, 국제업무지역을 건설하거나, 공원을 짓자는 등의 다양한 것이었다. ‘용산 주둔지’가 서울에서 차지하는 지리적 위치를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래 전부터 그 변화를 꿈꾸어 왔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미 1970년대부터 정부 측에서도 이런 꿈을 꾸어 왔는 데도 불구하고 21세기에 접어든 지금까지 아무런 구체적인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여기에는 불행한 우리의 현대사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이 점에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기도 하다. 외형적 성과주의로 사람들을 내몰았던, 그 결과 부실과 비리로 점철된 난개발을 가져왔던 ‘과과독재’에 의해 훼손되지 않은 땅으로 ‘용산 주둔지’는 남아 있기 때문이다.

문화생태공간 구상은 이 드넓은 땅을 ‘자연 숲’으로 조성하여 황폐화된 서울의 생태상을 되살리려는 계획이다. ‘용산 주둔지’는 서울의 남북 녹지

생태축을 복원할 수 있는 유일한 대규모 공유지이다. 다시 말할 필요도 없이 서울의 녹지 훼손은 이미 심각한 상태이다. 자동차 수의 급증에 따라 서울의 대기오염은 멕시코시티보다 더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 서울의 상공은 광화학 스모그로 늘 뿌연 상태이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치가 바로 ‘용산 주둔지’를 문화생태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 구상이야말로 현재의 생태위기 상황에서 공유지를 가장 정의롭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이다.

본래 정의는 사람 사이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정의’를 뜻한다. 그러나 산업화에 따른 환경문제의 악화를 배경으로 새롭게 ‘환경정의’의 개념이 제기되었다. 이것은 ‘사회정의’를 자연의 영역으로까지 확장해서 생각할 것을 요청한다. ‘공간정의’는 이러한 ‘환경정의’를 공간에 초점을 맞춰 재정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그것은 ‘공간’이라는 자연적 희소재의 평등한 분배와 이용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그것은 현 세대, 현 세대와 미래 세대, 사람과 다른 생물을 모두 공간의 주체로 고려할 것을 요청한다. 문화생태공간 구상은 이러한 ‘공간정의’를 그 인식론적 바탕으로 삼는다.

이 점에서 ‘현상유지’를 추구하는 미국의 태도는 극히 불의한 것이다. 그러나 더욱 불의한 것은 이러한 미국의 태도를 불가피한 것으로 용인하려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불행은 이러한 사람들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정부조차 기본적으로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데 있다.²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수레바퀴는 때때로 정의의 힘에 의해 돌기도 한다.

22) 한 연구자는 이런 상황을 가리켜, ‘분단과 전쟁, 그리고 수십 년간의 냉전의 문화, 그리고 바로 그 긴 세월 내내 한반도의 군사와 정치를 좌우해 온 한·미간의 비대한 종속적 군사관계 속에 길들여져온 한국의 지배엘리트는 그 과정에서 ‘정신적 장애아동’으로 되었고, 불행히도 아직도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이삼성, 1995: 10)고 비판한다. 미군에 의한 노근리 양민학살사건을 사실상 부인한 양성철 주미대사(9월), 한·미간의 현안에 관한 부정적 견해를 소수의 의사로 표현한 문일섭 국방차관(10월)을 보면 이 연구자의 지적에 수긍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용산 주둔지’를 포함한 전국의 주한미군 기지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저항이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

이제는 주한미군 기지들의 반환을 전제로 그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꿈꾸어 볼 때가 되었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만, 아직 상황이 썩 좋은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꾸는 꿈이 더욱 구체화될수록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도 그만큼 더 커지지 않을까? 이 글에서는 ‘군사공간의 생태적 재생’을 그 큰 방향으로, ‘문화생태공간 구상’을 하나의 실천목표로 제시해 보았다. ‘용산 주둔지’를 ‘문화생태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운동에 많은 사람들의 활발한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홍빈. 1997, 『강홍빈의 도시문화탐사⑨ 용산미군부대: 불행한 역사가 남긴 금단의 땅』, 《주간동아》 109호, 1997년 11월 21일(http://www.donga.com/fbin/news_plus?d=news109&f=np109hh030.html).
- 김용한. 1996, 『용산 미군기지의 문제점 진단과 해결방안』, 전국연합 외. 1996, 『우리땅 용산 미군기지 되찾기 대토론회 자료집-용산 미군기지 진단과 민족적 활용방안에 대한 토론회』.
- 김진균·홍성태. 1996, 『군신과 현대사회-현대 군사화의 논리와 군수산업에 관한 연구』, 문화과학사.
- 유용원. 2000, 『최초공개-주한미군 기지 및 훈련장 93곳 7445만평』, 《주간조선》 2000년 6월 8일치(<http://weekly.chosun.com/news/html/200006/200006020036.html>).
- 이삼성. 1995, 『미래의 역사에서 미국은 희망인가』, 당대.
- 이장희. 1999, 『평화통일을 위한 한미군사관계의 국제법적 조명-한미행협 개정을 재촉하면서』,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엮음. 1999, 『끝나지 않은 아픔의 역사-미군범죄』, 개마서원.
- 이장희 외. 2000,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연구』,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 이정록·김송미·이상석. 1997, 『20세기 지구촌의 분쟁과 갈등』, 푸른길.
- 정기용. 2000, 『부엌 속의 미군기지: 도시원형의 생태적 회복을 위하여』, ASEM 2000 한국민간단체포럼 문화분과 워크샵, 『용산미군기지를

문화생태공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 모색」.

- 조명래. 1996, 『용산기지 이전과 그 활용방안』, 전국연합 외(1996), 『우리 땅 용산 미군기지 되찾기 대토론회 자료집-용산 미군기지 진단과 민족적 활용방안에 대한 토론회』.
- 조성식. 2000, 『인터뷰-불법 호텔건축 美軍에 NO하는 성장현 용산구청장』, 《신동아》 2000년 5월호(http://www.donga.com/docs/magazine/new_donga/200005/nd2000050330.html).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엮음. 1999, 『끝나지 않은 아픔의 역사-미군범죄』, 개마서원.
- 홍성태. 2000, 『위험사회를 넘어서』, 새길.
- 홍용식. 1991, 『우주를 향한 인간의 꿈』, 동아일보사.
- 황상철. 2000, 『소파를 개악하자고?』, 《한겨레21》 2000년 7월 8일치(<http://www.hani.co.kr/section-021010000/2000/021010000200007180318012.html>).
- Brand, Stewart. 1999, 박근서 옮김. 2000, 『느림의 지혜-세상에서 가장 느린 컴퓨터 속에 숨겨진 생각』, 해냄.
- Renner, Michael. 1991, 『환경에 대한 군대의 전쟁행위』, 김범철·이승환 옮김. 1991, 『지구환경보고서 1991』.
- Shulman, Seth. 1992, *The Threat at Home: Confronting the Toxic Legacy of the U.S. Military*, Beacon Press.
- SIPRI. 1976, *Ecological Consequences Of the Second Indochina War*.
- Toffler, Alvin. 1994, 이규행 감역. 1994, 『전쟁과 반전쟁』, 한국경제신문사.
- WCED. 1987, 조형준·홍성태 역. 1994, 『우리 공동의 미래』, 새물결.
- Wiener, Nobert. 1954, 최동철 역. 1978, 『인간활용-사이버네틱스와 사회』, 전파과학사.